

야권 “尹 담화 2000명 집착... 불통 정부” 맹비난

윤 “의료계, 줄이려면 통일안 제시”
민주 “기존 일방적 주장만 전달해”
이낙연 “2천명 고집... 변명만 있어”
국힘 일각서도 탈당 요구 등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2000명 숫자에만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광주 광산을 후보인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날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횡”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 고집과 변명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지금 의료 현장은 1분이 아쉬울 만큼 다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가 생중계되는 가운데 1일조선대병원에서 환자 등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그는 “윤 대통령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 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는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

회견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9차례에 걸친 의정 논의가 공허했듯 의사와 정부간의 협의체만으로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피의자로 보느냐”고 물아세웠다.

강미정 대변인은 “혹시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해결책을 내놓을지 기대하며 지켜봤지만 ‘역시나’였다”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50여분에 걸쳐 일방적으로 쏟아부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

가 놀라웠다”며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지역 카르텔’로 보고 있다. 상대를 저런 방식으로 대하면 대화나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대국민담화를 두고,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적잖은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지도자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남구살리기’ 지원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방금 대통령께서 의료계 파업 관련 담화를 했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숫자에 매몰될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자영업자 육아휴직·아동 기본소득... 여야, 민생공약 경쟁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2억 상향”
민주연합 “24세까지 월 30만원 지급”

여야가 오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앞다퉀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열린 유세

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조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민생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

상금을 받은 분 중에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

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 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

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이 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가증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